

# “감염예방은 국제적 모범, 산재예방은 세계 꼴찌”

✎ 이윤경 기자(부산본부) | ⓒ 승인 2020.04.22 22:26

## 기업처벌법 제정, 총고용 보장 촉구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을 펼쳤다. 선전전을 마친 후 11시부터는 부산노동청 앞에서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전전과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에서 함께 하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지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올해 4월 15일까지만 해도 177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라고 말한 뒤 “반복적 산재사망 끝장,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 염동훈 서비스연맹 농협부경유통노조 위원장,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분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발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고였다”라면서 “노동부는 권고가 있는지 5개월이 지나서야 ‘장기적 검토, 지켜보겠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업들의 건의는 전폭 수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방기 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염동훈 서비스연맹 농협부경유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은 노동유연화와 최저임금 삭감 등을 요구한다”라고 분노하며 “노동 재난 극복을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은 “2018년부터 2년간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322명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2~3일에 한 명씩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기업의 연쇄살인이다. 사람을 죽이는 노동현장을 방치하는 노동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한 사무처장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비명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분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정상래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비롯한 대표단들이 노동청을 향의 방문했다.



부산고용노동청 항의 방문



이윤경 기자(부산본부) [ziyo16@daum.net](mailto:ziyo16@daum.net)